

편집, 그 보이지 않는 손



글 권석천
중앙일보 사회2부장

“보이는 것만이 진실은 아니다.” 지난 10월 개봉한 영화 『나를 찾아줘(Gone Girl)』의 팸플



2014년 개봉한 영화 『나를 찾아줘』 포스터
(출처 : 네이버 영화[movie.naver.com])

릿에 실린 문구다. 영화는 결혼기념일 아침 아내가 실종되면서 시작된다. 남편은 아내를 살해해 시신을 유기했다는 혐의에서 벗어나려 애쓰지만 그럴수록 그를 향한 의심의 올가미는 점점 더 죄어든다.

기자라는 직업 때문인지 영화관 문을 나서면서 든 생각은 미디어에 관한 것이었다. 영화 속에서 실종 사건이 알려지자 취재차량들이 물밀듯 밀려오고, 에워싸고, 몰아간다. 중요한 건 진실이 아니라 눈앞에 보이는 스토리다. 어린 시절 베스트셀러 동화의 모델이었던 여성과 불성실한 남편, 그리고 아내의 실종. 기자라면 누구나 매력적인 프레임(frame)임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상황은 전혀 뜻밖의 방향으로 전개된다. 기삿거리에 굶주린 미디어들은 이번엔 그쪽으로 달려간다. 진실은 중요하지 않다. 사건은 드라마틱할수록 좋고, 결말은 행복한 쪽이 낫다. 그것이 영화 속 언론의 기승전결이다. 한국 언론

은 과연 여기에서 얼마나 자유로운가.

취재기자부터 보자. 기자의 직업병 중 하나가 ‘얘기 된다/안 된다’로 세상을 재단한다는 것이다. 가족이나 친구들과 대화를 하다가도 “얘기 되네” “얘기 안 되네”를 판단한다. 기삿거리가 될 것 같으면 눈을 반짝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금세 심드렁해진다. 그래서 가족·친구들로부터 “얘기 안 되면 말도 못 하나”는 지적을 받곤 한다.

직업의식에 투철한 게 잘못된 아니다. “개가 사람을 무는 건 기사가 아니다. 사람이 개를 무는 것이 기사다.” 이 오래된 격언처럼 보다 새롭고, 보다 뜨겁고, 보다 관심을 끄는 사안을 따라가는 것은 기자의 본능이다. 문제는 ‘얘기 된다/안 된다’의 2분법이 지나치게 완고하다는 데 있다. 취재를 한 뒤 판단하는 게 아니라 먼저 ‘얘기 된다/안 된다’부터 예단하고 취재에 들어갈 때가 많다. 의욕이 지나치다보면 얘기가 안 되는 것을 얘기 되는 쪽으로 취재하는 경우도 있다. 의식적으로 사실을 과장·왜곡한다기보다는 무의식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속아 넘어가는 것이다. 다양한 팩트가 있을 때, 자신이 세운 기사 프레임(frame)에 맞는 팩트는 크게 보이고, 프레임에 맞지 않는 팩트는 하찮게 보이는 식이다.

이렇게 취재 과정에도 ‘보이지 않는 편집(in-visible editing)’ 작용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외면한다면 언론 보도는 현실과 다르게 변형될 수

밖에 없다. 변형은 팩트를 요약하고 전달하는 과정에서도 일어난다. 언뜻 모순돼 보이는 것들이 뒤섞이기 일쑤이고, 한두 마디 말로 요약할 수도 없는 현실을 좁은 지면, 짧은 기사에 욱여넣다보면 기자 눈에 중요한 사실관계만 ‘취사선택’하게 되는 것이다. 이 취사선택은 취재 과정에만 그치는 것일까.

현장의 취재기자들이 보내온 기사를 수정해서 지면에 실는 역할을 하는 건 취재부서 부장들이다. ‘데스크’로 불리는 이들은 취재현장에서 생산된 기사를 처음 읽는 ‘1차 독자’다. 20년 안팎의 기자 경력을 가진 이들은 풍부한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취재를 지시하고, 기사를 판단하고, 검증한다. 또 편집국장(부국장(에디터) 등)이 참여하는 편집회의에서 기사 아이টে임을 보고하고 논의한다.

데스크의 가장 큰 책무는 기사 방향을 제대로 잡는 것이다. 또 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사 문장을 다듬는 것이다. 외부(현장)와 내부(편집국) 사이의 접점이라고 할 수 있다. 만약 이 접점에 문제가 있다면 안과 밖의 소통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이런 조건에서 데스크가 범하는 실책은 대부분 ‘얘기 되는 쪽으로’ 기사를 키우려는 욕망에서 비롯된다. 현장의 취재기자들이 보고한 내용 중 기사 프레임에 맞는 부분은 부각시키고 프레임에 맞지 않는 부분은 배제할 가능성이 높다. “보

고에 왜 필요 없는 내용까지 넣느냐”고 취재기자를 질책하기도 한다. 또 한 차례의 ‘편집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이다.

개인적인 고백을 하자면 3~4년 전 부장 밑에서 보조데스크를 할 때 이상한 습관이 생겼다. 기자들로부터 보고를 받을 때 자꾸 말을 끊곤 했다. “그러니까, 이래서 이렇다는 얘기지?” 보고를 충분히 듣는 게 아니라 내 경험과 판단에 비춰 자꾸 예단을 하려고 했다. 마감 시간에 쫓기는 상황이긴 하지만 1, 2분 더 들어야 하는 것 아닐까. 망년회 때 “내년부터는 여러분들 말을 끝까지 들겠다”고 다짐했지만 불과 한두 달 뒤에 원래 모습으로 돌아갔다. 데스크가 된 지금, 과거의 잘못된 습관을 반복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듣고 또 듣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 절감하고 있다.

다음 공정은 말 그대로 편집이다. 편집은 지면의 아웃라인(outline)을 그리고 제목을 정하는 일이다. 특히 신문에서 편집의 중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모바일 시대에 인터넷 언론과 차별화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편집이다. 물론 기사를 쓴 취재기자만 이름이 들어갈 뿐 편집기자의 바이라인(byline)은 나오지 않는다.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도 독자들에게 ‘보이지 않는 손’인 셈이다.

편집기자들은 취재기자 못지않게, 아니 더 치열하게 고민한다. 가장 긴 시간을 근무하는 직종이기도 하다. 취재기자는 기사를 보내는 것으로

일이 끝나지만 편집기자는 기사를 받은 다음부터 일이 시작된다. 여기에서 ‘기사를 받은 다음부터’라는 말은 절반의 진실이다. 시시각각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편집기자가 기사 흐름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면 제목을 달기 어렵다. 그래서 유능한 편집기자는 기사가 송고되기 전부터 해당 부서의 데스크와 취재 기자에게 묻고, 또 묻는다. 그런 대화들이 끊임없이 오갈 때 좋은 제목이 뽑힌다.

편집기자들이 중요한 건 그들이 ‘2차 독자’이기 때문이다. 현장에 있는 취재기자가 보내온 기사의 개선할 부분을 독자의 입장에서 찾아낸다. 취재기자와 취재부서가 빠져 있는 ‘집단사고(group thinking)’를 깰 수 있는 것도 편집기자들이다. 아무래도 취재 현장에 가까이 있다 보면 출입처나 취재원의 논리에 함몰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하지만 복잡한 현실을 한 줄의 제목으로 압축하는 과정에서 또 한 차례의 여과 과정을 거치게 된다. 특히 독자의 눈길을 잡아당길 제목을 정하려면 좀 센 팩트에 주목하기 마련이다. 밋밋한 것보다 생생하고 자극적인 것이, 과거에 있었던 것보다 과거에 없었던 것이, 선과 악의 경계가 불분명한 것보다 분명한 것이 제목으로 더 나은 게 사실이다. 어떤 때는 제목이 기사 내용을 앞서가기도 한다.

취재기자→데스크→편집기자, 이 3단계의 편집을 거쳐 사실 혹은 현실은 지면으로 바뀐다. 이러한 편집은 과연 나쁜 것일까.

편집 자체가 악(惡)이라고 할 순 없다. 김정은 전 명지대 교수는 최근 출간한 『에디톨로지』에서 “세상 모든 것들은 끊임없이 구성되고, 해체되고, 재구성된다”며 편집의 시대가 열렸음을 선언한다. 그는 “좋은 지식의 기준은 검증가능성이나 반증가능성이 아니라 편집가능성”이라고 제시한다.

그의 지적대로 만일 편집이 없다면 우리는 그 많은 사실을 쉽게 정리하고 판단할 수 없을 것이다. 편집이 불가피하다면 편집을 어떻게 제대로 할지를 고민해야 한다. 과연 편집의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있을까.

주목해야 할 것은 수사와 재판이다. 검찰 수사와 법원 재판도 일종의 편집과정이다. 발견된 사실, 즉 증거에 대한 증거능력을 인정하거나 부인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수사·재판의 원칙을 적극적으로 참고할 필요가 있다.

대전제가 되는 원칙은 증거재판주의, 다시 말해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307조1항)”는 것이다. 증거가 부족한 상태에서 단순한 의심만으로 기사를 써선 안 된다는 얘기다. 여기에 누구도 토를 달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관건은 ‘어떻게?’다.

일단 위법수집증거 배제의 법칙이 있다.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제308조의 2에 따라 영장 없이 압수한 증거물의 증거능력은 부정된다. 나아가 독수(毒樹)의 과실(果實) 이론에

따라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에 의해 얻은 2차적 증거도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언론도 다르지 않다. 취재가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그 결과물인 기사의 정당성도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직접 법원에서 진술하지 않고 다른 형태에 의해 간접적으로 제시되는 증거는 증거로 보지 않는다는 전문(傳聞)법칙도 마찬가지다. 전해 듣는 것은 부정확하게 전달됐을 가능성이 크고, 반박하기도 어렵다. 당사자를 직접 취재해야 하고, 수사기관의 발표 내용도 사실과 맞는지를 거듭 확인해야 한다. 이렇게 취재와 거리가 먼 소송법 원칙까지 끌어들이어 얘기하는 것은 그만큼 취재·보도 과정의 편집이 개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언론인들 자신이 믿고 있는 것, 믿고자 하는 것이 진실인지 끊임없이 돌아보고 회의해야 한다. 그러할 때 언론의 신뢰위기 현상을 극복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나는 지금 같은 다매체 시대, 온갖 보도가 쏟아지는 세상에서 스스로의 신용등급을 높여나가는 매체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대부분의 인간은 자신이 믿고 싶은 것만 믿는다. 하지만 믿고 싶지 않은 것도 받아들여야 한다. 그 원칙은 언론에 더 강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이제 언론의 ‘보이는’ 편집 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편집에 대해서도 사회적 토론이 이어져야 한다.